

정부는 환경개선 의지 있는가

—'92년도 환경예산 58% 삭감조치를 보고—

굳이 「모든 국민은 환경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양비론을 내세우지않더라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각자가 환경보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92년도 환경부문 예산액을 보면, 국민과 기업에겐 많은것들을 강요해온 정부 스스로는 얼마나 환경보호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당초 환경관련부처가 요구했던 9천6백79원에서 4천67억원으로 요구액의 58%나 삭감시켜버린 것이다.

물론 예산당국이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기다.

그러나 나날이 악화되고있는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이같은 과감한 삭감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환경관련부처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전제로 허무맹랑하



李龍雲
(본연합회 회장)

게 예산요구액을 크게 늘렸거나, 반대로 경제기획원이 아무런 고려없이 마구 칼질을 했을 경우에도 있을 법한 결과다.

광화학스모그니 뭐니하면서 경보발령을 내렸던 것이 언제며 낙동강폐놀오염사건 이후 붓물터지듯 발표됐던 정부의 대책들이 불과 얼마전의 일인가.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내년에 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수위에 있는 대도시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수행할것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환경보호와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환경예산의 근

60%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취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수없는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우리앞에 가지적으로 드러난 수질·대기·폐기물·토양오염문제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장래를 외면해선 안된다. 잠복중인 그러면서 예상 가능한 환경문제를, 시기를 놓쳐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만 한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환경행정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환경예산삭감은 해도 너무했다. 이는 정부의 환경개선 의지가 부재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한계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안이한 생각과 태도를 쇄신해야 한다.

진정 정부와 정치권이 이나라 국민들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그리고 환경보호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환경예산은 반드시 늘려야만 한다.◀